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이렇게 만든다

학년당 10학급 자사고 설립… 교육특구로

교통·행정·방범 등 U-city 서비스 구축
신재생·농생명 클러스터 육성 부지 확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 방안이 만들어졌다. 크게 친환경·선진 도시기법 도입을 통한 정주환경 여건 개선과 교육특구지정 등을 통한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산업경제기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용지의 특화발전 및 광역경제권 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거점 네트워크 구축 등도 발전 방안으로 제시됐다.

◇**우수 교육여건 조성**=이전 기관들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내려옴에 따라 이전 기관 직원 자녀의 교육환경에 크게 신경을 쏟았다. 우선 혁신도시 내 3만3천㎡부지에 학년당 10학급인 자립형 사립고(한전고) 설립 방안과 전남과학고와 전남외국어고 이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남과학고와 전남 외고는 부지매각 및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3개소·초등학교 5개소·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3개소가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 동신대 부설 '공공유아원'이 설립·운영되고 초등학교 내 300평 부지에는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는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방안은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혁신도시와 광주시 간 공동학구제 시행 검토 방안도 포함됐다.

◇**친환경·최첨단 도시로**=나주 혁신도시는 도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교통·행정·방범 등 최적의 U-city 서비스가 구축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모델이 개발된다.

또한, 도시 색채 및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도시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기법이 도입된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에 접근이 쉽도록 하는 무장애 설계기법(Barrier-Free Design) 추진 방안이 마련된다.

혁신도시 내 26만 평 가량의 부지에는 열병합발전소 등이 들어서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가 조성되고, 전통 한옥마을·종합위락시설·주변 상업시설·공연시설·상징탑·역사문화관 등 거점관광단지 조성 방안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내에 39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고, 호수공원 및 저수지 등 주요 녹지 축을 교량 하부 등을 통해 연결시켜 시민들의 건강 및 휴식공간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도시 내 모든 건축물 조명이 LED 조명 사용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이전기관의 신축 및 단지조성 설계에 이를 반영해 추진된다.

또한, 가로등과 신호등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신 재생 에너지와 연계된 LED 조명 사용이 의무화된다.

◇**자족기능 강화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애초 나주혁신도시는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집중한 결과 유망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시설용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 용지 1만1천㎡와 주거용지 5만4천㎡ 등 6만5천㎡의 부지가 용도 변경을 통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로 확대된다. 클러스터 구축 추진 전략은 이전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거점으로 한 신 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농어촌 공사를 위주로 한 농생명(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이 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한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와 정보통신 클러스터 육성 방안도 추진된다.

◇**이전 기관 및 직원 지원 방안**=이전 기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전 기관 임직원 이주 도우미 센터 운영 등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 핵심사업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나주시 공무원 특별채용(10%)과 동신대 입학시 매 100만 원 장학금 지급, 남도하숙 특례입사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임직원 여가활동을 위한 나주호 관광지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 확보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정착금(세대당 100만 원 이하)도 지원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찰과 법원이 노조가 점거파업 중인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가운데 20일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경찰 병력이 공장 안으로 10여m 전진배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촉즉발' 쌍용차

노조 점거농성 계속… 경찰 공권력 투입 가능성 긴장

경찰과 법원이 20일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지만 도장공장 안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노조도 퇴거에 불응하면서 노조원 강제 해산은 무산됐다.

이날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경찰은 노조원들이 점거 중인 도장공장에 대한 공권력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여전히 노조와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법원집행관과 채권단 5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평택공장 정문을 통해 들어가 퇴거명령 최고장을 노조에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노조가 새총을 쏘며 반발해 되돌아온 후 10시30분과 11시25분 3차례 최고장 전달을 다시 시도했으며 여의치 않자 집행을 포기하고 평택공장을 떠났다.

법원집행관은 "오늘이 최후통첩이다"고 말해 향후 공권력 협조로 도장공장 노조원들의 강제해산에 나설 뜻을 비치기도 했다.

경찰도 오전 10시께 공장 외곽 경비를 맡은 1천여명을 제외하고 20여개 중대 2천명의 병력을 정문과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통해 일제히 공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경찰력이 진입하자 도장공장 옥상에 있는 노조원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경찰을 향해 볼트와 너트를 발사했으며 불을 붙인 타이어와 LP 가스통을 정문쪽으로 굴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34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력을 공장 안팎에 배치했고 소방당국 협조로 물포와 조명차,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헬기 등 장비 30여 대를 동원했다.

쌍용차는 노조가 공장 점거파업에 돌입한지 60일만인 20일 평택공장 본관과 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출근시켜 일부 업무를 재개했다.

출근한 직원들은 3천여명으로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 창원공장 등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오전 8시30분까지 가벼운 차림으로 공장 맞은편 도원주차장으로 집결, 안전교육 등을 마친 뒤 오전 10시5분께 법원집행관과 함께 공장 본관으로 출근했다.

600여명이 연구소, 400여명이 본관으로 출근했으며 생산직 직원 2천여명 중 일부는 공장 경계근무에 배치되거나 안성 공도읍 연구소로 이동해 교육을 받기도 했다. 회사 측은 도장공장 등이 점거돼 있어 당장 생산재개는 어렵지만 연구소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신차개발계획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점거파업 중인 쌍용차 노조 간부 이모(34)씨의 아내 박모(29)씨가 이날 오후 안성시 자택에서 목을 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사교육비 '눈덩이' 경제회복 걸림돌

작년 18조7천억… 가구당 112만원
가계 소비 위축·출산율 저하 초래

사교육비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거나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20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의 36조8천639억원보다 3조132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239만2천원으로 2000년의17조5천453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는 작년에 18조7천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112만2천원에 달한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월평균 32만1천253원으로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4만6천240원에 비해 6.9배나 됐다. 이 배율은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올해 1분기에 월평균 55만7천45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3만9천246원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11만7천459원에서 10만9천810원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꼽았다. 사교육비 지출은 탄력성이 낮아 경기가 나빠져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계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비도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이지만 투자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조기 사교육이 낭비에 그친다면 그만큼 경제 성장의 동력을 까먹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이 오히려 인적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환웅 수석부회장은 "취학 후 학교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조기 사교육은 돈은 돈대로 쓰고 자녀에게는 '학습 노동'을 시켜서 창의성 계발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